

폴란드, 내년도 경기부양 예산안에 대한 논란 가열

□ 2003년도 예산안 확정

- 지난 9월 23일 각료회의에서 2003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, 재무 장관인 Kolodko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적자 확대를 최대한 억제 하면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밝혔음.
- 우선, Kolodko는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적자 규모를 387억 즐로티 (GDP의 4.9%)로 계획하고 있어, 전임 Belka 재무장관이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였던 적자규모 430억 즐로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임을 강조하였음.
- 또한, Kolodko는 재정지출 증가가 경제회복 속도를 앞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, 그 예로 2003년 예산안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2002년의 24.9%보다 낮은 24.7%로 책정되었다고 말했음.

□ 내년도 예산안, Kolodko 장관의 경기부양 의도 담겨

-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① 전임 Belka 장관이 약 8개월의 재임기간 중 재정수지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확립했던 '물가상승률+1%'의 재정지출 증가 원칙을 포기하였고, ② 내년도 경제성장률 3.5%라는 목표치를 전제로 예산안을 구성한 것임.
- 내년도 예산안 편성문제로 정부의 다른 각료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

로 알려진 Belka 장관의 사임으로 재무장관에 취임한 Kolodko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중도좌파 정부시절 폴란드의 고도성장을 이끌면서 강력한 성장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음.

- 前 중도우파 정권의 부적절한 재정관리로 2001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, 2002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.4%인 400억 즐로티(약 96억 달러 수준)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 따라서 Kolodko의 입각은 재정수지 불균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, 이에 대해 Kolodko는 물가 상승률+1%, 즉 실질재정지출 증가율 1%라는 신중한 재정관리 원칙을 고수할 것을 밝혀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켰음.
- 그러나 재정수지 문제 못지 않게 빈사상태에 빠진 폴란드 경제의 회복을 중요과제로 안고 있는 Kolodko는 '물가상승률+1%'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음. 한편, 폴란드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지난해 동결되었던 공공부문 임금 인상률을 4%로 확정하였는데,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치 2.3%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재정지출 확대는 이미 금년도부터 나타나고 있음.
- 재정수지 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지방선거를 앞둔 Miller 총리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, 동 예산안은 내각의 지지는 물론이고 강력한 경기부양을 요구해 온 정치권의 폭넓은 지지를 업고 의회 통과도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음.

□ 낙관적 예산안에 대한 비판 제기

- Kolodko의 예산안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3.5%를 전제로 실질재정지출 증가율을 2.2%로 설정하였으나,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비판받고 있음.

- Kolodko는 남은 3/4분기 및 4/4분기 성장률이 각각 1.7%와 1.8%의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냄으로써 내년도 성장률은 무난히 3.5%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. 그러나 1/4분기와 2/4분기 성장률이 각각 0.5%와 0.8%에 그친 폴란드 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은 정부 예산상 목표인 1.2%를 넘기기도 버거운 상황으로, 내년도의 3.5% 경제성장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.
- 특히, EU 지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짐으로써 대외여건 호전의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 다만, 아직 높은 실업률과 실질임금 상승에도 내수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도 내수경기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됨.
- 그러나 2000년 이후 급격히 심화된 폴란드의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있는 바,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이 경기회복의 관건이지만 아직까지 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.
- 따라서 내년도 폴란드 경제의 성장률은 잘해야 2.5%~3%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, 지난 2001년 前 정권의 Bauc 재무장관이 예산수정안 제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된 사례와 같이, Kolodko는 내년 중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오코프스키가 폴란드 케지저웨이 비하시어 지기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우려도 남아 있음.

□ 중앙은행, 예산안에 대한 비판 제기

- 지난해 출범한 이후 경기부양을 원하는 Miller 정부와 물가불안을 우려하는 중앙은행과는 그간의 마케코 가드시 지체된 시오코프스키의 물가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.

-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긴축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, 정부와 중앙은행 간 긴장관계가 크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던 것이 사실임. 그러나 지난 10월 4일 중앙은행이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양 기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.
- 중앙은행은, Kolodko의 “안정과 성장을 위한 예산”이란 주장은 허구라며, ‘물가상승률+1%’원칙 포기과 낙관적인 성장전망에 대한 비판을 집중시켰음.
-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가 조속한 시일 내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% 이내, 공공채무는 GDP의 60% 이내로 억제해야만 하며,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 압력이 커지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정책과제로 자리잡고 있음.
- 따라서 중앙은행은 재정관리의 실패가 재정적자 확대는 물론, 공공채무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,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 및 공공부문의 자금조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금리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다시 금융긴축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섬.

책임연구원 고재호(☎3779-6663)

E-mail : kohjh@koreaexim.go.kr